『한국학논집』 제35집(2007), pp. 73~118.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

박 찬 승

1960년대 이후 한국학계를 지배해 온 이론은 내재적 발전론이다. 내재적 발전론이란 식민주의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두한 이론이다. 즉 한국사는 타율에 의해 움직여 온 역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재적으로 움직여 온 역사라는 것, 그리고 정체된 역사가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 내재적 발전론이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1960년대 한국사에서 시작되어 국문학, 한국철학 등 한국학 전반에 걸쳐 확대되어 한국학계의 통설이 되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1)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주장하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2)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특수성보다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 등장한 이와 같은 내재적 발전론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거꾸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한국사의 시대구분론에 집중되었다. 즉 사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을 한국사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조선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주요 논쟁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내의 경제사학자들, 미국의 한국학자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계열의 국

www.kci.go.kr

내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일면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일면에서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은 위와 같은 비판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여겨진다. 내재적 발전론은 이제 환골탈태해야 하는 전기를 맞이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내재적 발전론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외재적 계기를 무시하는 일국사적인 내재적 발전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재적 계기와 내재적 계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또 내재적 발전론은 서구의 역사발전과정을 모델로 삼는 일원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역사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계사의 발전과정을 '복수의 경로'로써 설정하고 각 나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학은 한국의 역사·문화가 가지는 개별성, 특수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동아시아적인 보편성,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 단어 : 한국학, 정체성론, 내재적 발전론, 일원적 역사관, 다원적 역사관

1. 전환점에 선 한국학 연구

최근 한국학 연구는 바야흐로 일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한국학 연구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의 두 축은 '민족주의적인 이념적 정향'과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연구방법

www.kci.go.kr

론'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이념적 정향과 연구 방법론 모두가 국내외 학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근대화론자로부터 탈근대화론자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주체는 다양하다. 실증적 측면에서 이론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근거도 다양하다. 비판의 강도는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학 연구는 일대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 글에서는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후자, 즉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내재적 발전론이란 식민주의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두한 이론이다. 즉 한국사는 타율에 의해 움직여 온 역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재적으로 움직여 온 역사라는 것, 그리고 정체된 역사가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 내재적 발전론이었다.[1] 그런데 196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 등장한 이와 같은 내재적 발전론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거꾸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글에서는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내재적 발전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그 논리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내재적 발전론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대신할 대안 혹은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정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할 것.
박찬승. 1994.「분단시대 남한의 한국사학」.『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김인걸. 1997.「1960, 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이영호. 2002.「내재적 발전론을 둘러싼 논의」.『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이헌창. 2007.「한국사파악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점」.『한국사시민강좌』40. 일조각.

www.kci.go.kr

2. 196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내재적 발전론

일제하 식민사관, 즉 식민주의 역사학은 타율성론 · 정체성론을 그 뼈대로 하고 있었다. 타율성론은 한마디로 한국사의 전개과정이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기보다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 역사관이다. 또한 정체성론은 개항 이전 한국사회는 일본의 10세기경에 해당하는 사회 단계에서 정체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이론은 이미 1930년대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8)에 의해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제의 식민사관의 정체성론, 타율성론을 조선사회 특수성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고, 조선사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를 부정하려 하였다. 그가 선택한 보편성론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이었다. 그는 한국사도 원시공동체사회 – 고대노예제사회 – 중세봉건제사회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다고 보고, 이를 한국사의 각 발전단계에 적용시켰다. 그는 삼국시대를 고대 노예제 사회로 보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세봉건제사회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자본주의맹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백남운은 타율-정체론에 대항하여 자율-발전론, 즉 내적 발전론을 내세운 것이었다.[2] 같은 1930년대 이청원도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조선역사독본』(1937)이라는 통사를 서술하였고, 아시아적 특수성을 가진 노예제-봉건제를 한국사에 모두 설정하였다. 다만 그는 노예제사회가 고려시대까지

2) 백남운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 · 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를 참조할 것.

www.kci.go.kr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전석담의 『조선사교정』은 '조선사회의 내적 발전법칙'을 해명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노예제 결여론을 주장함으로써 보편적 발전단계론에서는 약간 벗어났다. 전석담은 당시 "우리는 한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발전법칙과 함께 그 사회의 특유한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백남운처럼 조선사회의 발전법칙을 세계사의 일원적 발전법칙에 해소시키는 공식주의에 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3] 그리고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은 비판하지만, '침체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과거 조선사회의 경제적 발전단계는 인류사회의 일반적인 발전단계에 즉응하여 발전해 왔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경제적 발전은 전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매우 완만하였고, 또한 각 발전단계를 개별적으로 고찰하더라도 그 곳에서는 단일한 대응관계가 압도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고, 낡은 사회적 대극관계와 중첩 또는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조선사회의 경제적 관계는 소위 '아세아적 정체성'을 표시하고 있고, 보다 적절히 표현하면, '침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4]

이처럼 비록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는 있었으나, 백남운 · 이청원 · 전석담 등은 유물사관의 방법론을 빌려 조선사회의 내적 발전법칙을 밝히려 하였고, 이는 식민사관의 타율-정체론과 대결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북한 역사학계는 그러한 입장을 계승하여 조선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논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원시사회-고대노예제사회-중세봉건제사회를 한국사에 모두 적용시키는 방향에서 논쟁이 정리되었다.

3) 전석담. 1948.「조선사 연구의 제문제」.『조선경제사』. 을유문화사
4) 전석담. 1949.「사회의 경제적 발전상의 '침체성'에 관하여」.『학풍』임시증간호. 12쪽.

www.kci.go.kr

백남운식의 보편적 발전단계론이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다만 고대노예제사회는 고조선사회로, 중세봉건제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로 비정되었다.[5]

1950년대 남한의 역사학계는 아직 식민사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유물사관에 입각한 내적 발전법칙 같은 것은 거론하기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에서 제기된 바 있었던 실학연구가 1950년대에 부활하였다. 실학 연구는 천관우에 의해 반계 유형원 연구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실학의 성격에 대해 "실학은 결코 근대의 의식도 아니고 근대의 정신도 아니다. 실학은 그 비판적 입장에서 봉건사회의 본질을 해부하고 노동하지 않는 계급을 비방하고 신분적 세습을 비판하고 대토지 사유를 비판했지만, 그 비판의 기조는 당우삼대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정체된 봉건사회를 극복하고 근대를 가져오는 거대한 별개의 역사적 세계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실학은 근대정신의 내재적인 태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하여, 근대사상의 맹아로서의 성격을 인정했다.[6]

국문학쪽에서도 이우성이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18세기 전후 '시대의 신요소' 특히 '士'의 존재와 신흥상인의 움직임이 연암의 문학과 사상의 창조성, 진보성을 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에서 소외된 士의 비판정신이 실학사상으로 전환되었던 바, 농촌의 토착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성호학파의 경우 현실비판이 복고적인 색채를 띠었던 데 반하여, 연암 그룹의 경우 도시적 분위기에서 서민세계와의 접촉으로 의식의 전진성 활발성을 확보하였

5) 이에 대해서는 김광진 외. 1957. 『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일송정. 1989)을 참조할 것.

6) 천관우. 1952 · 1953「반계 유형원연구 – 실학 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 단면」『역사학보』2 · 3.

www.kci.go.kr

다고 썼다. 이우성은 이때 고립적이 아닌 하나의 유파로서 '실학파 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7]

실학 연구의 재개는 학계에 조선후기 사회와 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1960년을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즉 조선후기 상업 · 수공업 · 광업 · 농업 부문에서 자본주의 맹아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북학 사상에는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19세기 후반 개화파의 사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이 북한 학계에서 1960년대초에 내놓은 『김옥균』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북한학계의 움직임은 중국학계의 그것과 비슷하였는데, 이는 남한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남한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과 민족사관의 계승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기백은 1961년에 내놓은 『국사신론』의 서론에서 식민사관의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론, 정체성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정체성론과 관련해서는 "동양사회가 그 자체 속에 발전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정체성의 이론은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동양사회도 모든 인류사회가 밟아야 할 일정한 발전단계 – 고대적 · 봉건적 · 근대적 – 를 반드시 거쳤으리라는 것이다. (중략) 동양사회가 서양사회와 어깨를 겨루게 되는 날에는 필연적으로 동양사회의 발전적인 요소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행해질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서구 자본주의 침투 이전에 이미 중국사회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열심인 것은 그러한 풍조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8]

7) 이우성. 1957.「실학파의 문학 = 박연암의 경우」.『국어국문학』16.
8) 이기백. 1961.『국사신론』. 일조각. 9쪽.

www.kci.go.kr

이후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은 김용섭, 카지무라 히데키, 김영호 등에 의해 이어졌다. 그리고 정체성론 극복과 '민족의 주체적 내재적 발전과정을 합법칙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기백의 표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9] 하나는 시대구분론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었다. 시대구분론은 결국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보편적 발전법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1967년 경제사학회가 주최한 한국사시대구분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김철준은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시기를 나말여초로 제시했고, 강진철은 고려후기 내지 조선초기로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봉건사회로 이행했다고 보고, 이 봉건사회를 나누어 삼한과 부여시대를 고대사회, 삼국성립 이후를 중세사회로 보려는 견해(김병하)가 있었다. 또 근대의 기점과 관련하여 여러 주장이 쏟아져 나왔는데, 유원동은 18세기에서, 조기준은 19세기 후반에서 근대의 기점을 찾았다.[10]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은 농업 · 상업 · 수공업 · 광업 등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다. 김용섭은 일련의 양안 연구를 통하여 서양의 자본가적 차지농과 유사한 '경영형 부농'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였다. 강만길은 상업에서, 송찬식 · 유원동 · 김영호는 수공업에서 각각 자본주의 맹아, 즉 원시적 자본의 축적과 노동자의 등장, 매뉴팩춰의 등장을 증명하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김용섭은 농법의 개량, 상업적 농업, 광작 등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 담당자층인 경영형 부농이 등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의 허종

9) 이기백. 1968.「1967년도 한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국사).『역사학보』39. 4~5쪽. 일부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용어를 일본의 한국사연구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이미 이기백교수가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0) 이기백. 1968.「1967년도 한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역사학보』39. 375쪽.

www.kci.go.kr

호는 평민층의 지주, 즉 서민지주가 등장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강만길 등은 상업에서 경강상인 · 개성상인 등 사상이 도고를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유원동 · 김영호 등은 수공업에서 근대적 생산양식의 단초적 형태인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 학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조선후기 수공업, 광업 분야에서의 매뉴팩춰를 확인하여 자본주의 맹아론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당시 김영호는 "단순화시킨다면 정체론의 극복 문제는 바로 맹아론의 제기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선사회 정체성론이 바로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다면 정체성론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11] 안병직은 맹아론 연구에 대해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에 있어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식의 배후에는 개항 전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조만간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에로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역사의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였다.[12]

이와 같은 자본주의 맹아론 연구는 사상사에서 조선후기 실학, 사회사에서 조선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였다. 조선후기 실학 연구는 1973년 『실학연구입문』과 1975년 『실학논총』에서 그 절정에 다다랐다. 『실학연구입문』에서는 유형원, 이익, 이중환, 유수원, 박지원, 우하영, 박제가, 정약용, 최한기 등 주요 실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 책의 서설에서 이우성은 실학자를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고증학파의 3개 유파

11) 김영호. 1969.「한국사정체성론의 극복의 방향 -시대구분과 자본주의 맹아의 문제」.『아세아』. 90쪽.

12) 안병직. 1981.「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345쪽.

www.kci.go.kr

로 구분하였고, 이후 이러한 구분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실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록 (영정조대의) 신학풍의 개창자들이 역사적 제약 때문에 '근대'라는 시대개념을 창조해내지는 못했지만, 당시 봉건사회의 말기적 징후 속에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이란 바로 근대로의 방향으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하여, 실학을 '근대지향의 학풍'으로 정리하였다.[13] 조선후기 신분제 변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호적과 양안을 자료로 한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구는 하층민의 신분 상승과 이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를 살피는 연구와, 지배구조의 모순과 붕괴의 측면에서 신분제의 동요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양반제가 동요하고 있었고, 반·상 및 양·천간의 신분혼효 내지 신분모호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왕조의 신분제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14]

역사학계의 조선후기사 연구가 이와 같이 자본주의 맹아론, 신분제의 변동, 실학의 발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는 국문학계, 한국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문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실학파 문학, 여항문학과 서민문학, 민속극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형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우리나라 20세기 초엽의 신문학은 현상적으로는 과거와 단절된 모습으로 출발하였지만, 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면 계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학운동을 요구하고 신문학의 훌륭한 결

13) 이우성. 1973.「실학연구서설」.『실학연구입문』. 일조각. 6쪽.

14) 이와 같은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1980년대 초에 나온 한국사연구회편.『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의 '농업의 발달과 지주제의 변동', '상공업의 발전', '신분제의 동요', '실학', '서민문화의 대두' 등의 항목에 잘 정리되어 있다.

www.kci.go.kr

> 실을 이룬 역량은 이미 중세문학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조선후기(17~18세기) 문학은 중세해체기의 문학이며, 근대문학의 원천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시하는 바, 실학파 문학, 여항문학, 서민문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항문학과 서민문학은 중간층과 민중들의 문학인 점에 특색을 가지며, 실학파 문학은 실학의 중요성과 함께 문제시되고 매력을 끌어왔다.[15]

조선후기 문학을 중세해체기의 문학이며, 근대문학의 원천으로서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형택은 17세기 중엽 이후 사대부 문학은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그 일각에서 '실학파문학'의 혁신적인 기풍이 조성되었으며, 중인 서리들이 중심이 된 중간층에서 여항문학이 형성되었고, 뒤이어 사회의 저류 기층에서 서민문학이 성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학들을 그 자체로 근대문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대문학을 지향한 문학이라고 평가하였다.[16]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1984년에 나온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3권)에서 조선후기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제1기"라고 명명하는 식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붐은 철학계에서도 일어났다. 윤사순은 실학의 철학적 기반을 분석하는 글에서 실학은 명보다 실을 중시하며, 경험론적 인식설을 제시하였고, 우주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은 욕구를 가진 자율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윤리 도덕은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며, 민본위민 사상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윤사순도 실학사상은 근대지향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정리하였다.[17]

한편 한국사학계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이 조선후기사 연구에만

15) 임형택. 1981.「실학파문학과 한문단편」.『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300쪽.
16) 임형택. 1981.「여항문학과 서민문학」. 같은 책. 315쪽.
17) 윤사순. 1990.『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열음사.

www.kci.go.kr

한정되지 않고 전 시대로 확대되어 갔다. 즉 선사시대 연구에서도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가 새로이 설정되었다. 또 일본인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전근대사회에서의 토지국유제론이 비판되고 사유론이 일반화되어 갔다. 또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한국사의 새로운 체계화는 앞서 본 것처럼 시대구분 문제로 연결되었다.[18]

한편 내재적 발전론 안에는 다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하나는 사적 유물론을 원용하여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세계사의 기본법칙으로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이후 단계까지 전망하는 변혁론의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대=자본주의사회를 역사발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하면서 조선후기에서 근대의 싹을 찾아보려는 근대주의의 입장이었다. 양자는 겉으로는 내재적 발전론의 틀 안에 같이 들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입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갈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19]

이상 한국학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재적 발전론의 의의를 점검해 본다면, 1)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주장하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2)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특수성보다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보듯이 내재적 발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한국사의 시대구분론에 집중되었다. 즉 사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을 한국사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조선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주요 논쟁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김인걸이 말하였

18) 박찬승. 앞의 글. 335쪽.

19) 이영호. 앞의 글. 339쪽. 뒤에 보듯이 후자의 근대주의 입장 가운데 일부는 199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www.kci.go.kr

듯이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사의 인식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으로서, 단순히 자본주의 맹아를 찾거나, 주어진 과거의 도식적인 인식틀을 한국사에 억지로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다.[20]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타율성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사의 인식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의 보편성을 어떻게 관련시켜 볼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3. 근대화론자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

조선후기 사회를 중세사회 해체기로 보고 근대사회의 맹아가 싹튼 시기로 보는 학설은 1980년대까지 학계의 통설로 자리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이론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안병직은 "사실상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의 출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론적 문제로서, 자본주의 맹아는 봉건제사회가 붕괴하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조선사회가 어떤 봉건제 사회였는가에 대해서 아직 한국 학계의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봉건제사회가 어떻게 붕괴되어 갔는가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두 개의 자본제적 경영사례만으로 자본주의 맹아단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이론적 무리가 있

20) 김인걸. 앞의 글. 148쪽.

www.kci.go.kr

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자본주의적 경영의 출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자료와 자료 해석상에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직은 자본제적 경영의 온전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21] 안병직의 이와 같은 지적은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학계의 연구가 자본주의 맹아에 집중되었던 반면 봉건제사회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 맹아의 사례 제시도 단편적인 사료들을 모아놓은 모자이크식 연구가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일동포 사학자 안병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자본주의 맹아론이 '부조적 수법'의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22]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이영훈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실증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실증적인 측면에서 맹아론자들은 맹아론의 요소에 적합한 사실들을 그것의 역사적 전체성,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과 분리하여 임의로 그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경영형 부농론을 뒷받침한 광작농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노비를 거느리고 대규모 농업경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후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가 17, 8세기 경에 이앙법의 보급으로 일시 부활되고 있었다가 19세기에 다시 소멸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쇠퇴할 운명의 존재, 당시 농학자들에 의해 비판받던 존재들을 1960년대의 자본주의 맹아론자들은 오히려 역사의 주체로서 부각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광업, 공업 부문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말하는 '분업에 기초한 협업'의 발생 주장도, 사실은 이들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초기부터 그러

21) 안병직. 1981.「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361쪽.
22) 안병태. 1975.『朝鮮近代社會經濟史硏究』. 東京. 일본평론사.

www.kci.go.kr

한 형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23]

이영훈은 또 이론적 측면에서도 맹아론이 기초하고 있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으로부터 추출된 기본법칙을 비서구사회의 다양한 역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려고 애쓰는 시골처녀의 욕심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으로 비유"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내재적 발전론에서 조선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조선사회의 기본경제구조를 '지주적 봉건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내재적 발전론이 한국사를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맞추어 단선적, 교조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24]

이영훈은 1996년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그가 지적한 맹아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첫째, 자본제로의 이행의 가장 기초적인 국면인 농촌공업의 성립이 실증된 것이 없었다. 공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어 온 바, 광업 · 제철업 · 유기업 등이 국역체제에서 벗어나 사적 상품생산체제로 진입했던 사실도, 이들 산업이 사회적 내지 국가적 분업관계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농업과 분리되어 있었던 점이나, 그 분업적 기술 및 노동편제는 역사와 함께 오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중요도가 과대평가되어 왔다. (중략)
>
> 둘째, 기초산업인 농업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조선 고유의 자연적 · 사회적 제 조건의 특질을 무시하고, 영국 근대농업의 그것과 동질시했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략) 한국역사학은 농업의 양극분해의 추세와 부농의 존재를 찾아냄으로써 맹아론의 가

23) 이영훈. 1987.「한국자본주의 맹아문제에 대하여」.『한국의 사회경제사』. 한길사. 58~61쪽.
24) 같은 글. 62~63쪽.

www.kci.go.kr

> 장 튼튼한 이론적 및 실증적 기초를 확보코자 하였다. 이른바 광작농이나 경영형 부농이 그렇게 해서 발굴된 자본제적 농업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극분해의 추세나 부농의 성장이 그 실증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장기시계열의 사례로 입증되지 못했다. (중략)
>
> 셋째, 17세기 이후 농촌의 정기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시장경제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정기시는 15세기 후반부터 점생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이면 5일장 체제로 성립하고, 18세기 후반 전국적으로 천육십여 장시 수를 정점으로 그 외연적 확장을 일단 완성하고 있다. (중략) 맹아론은 이같은 시장경제의 발전 그 자체를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그 이론적 기초는 마치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경제발전단계론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순하였다.[25]

이영훈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선후기의 수공업 · 광업, 농업, 그리고 시장에서 서구의 자본제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는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자본주의의 맹아가 아닌 소농사회의 성립에서 찾고 있다. 그는 조선후기의 농업의 역사상은 임노동에 기초한 자본가적 차지농의 등장이 아닌, 가족노동에 기초한 소농경제의 성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의 글에서 일관되게 이어졌다.[26]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조선후기 가운데 특히 19세기, 즉 개항 이전의 시점에서 조선의 경제는 심각한 정체와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선후기의 경제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구의 대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농

25) 이영훈. 1996.「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경제사학』21. 78~85쪽.
26) 이영훈. 2002.「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역사와 현실』45.

www.kci.go.kr

촌사회에서는 자급경제 · 재분배경제 등 여러 형태의 非市場經濟가 상당한 비중으로 강고히 존속하였다. 둘째,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 조선의 경제는 완만한 성장과 안정의 추세에 있었다. 셋째, 대조적으로 19세기부터는 인구와 시장이 정체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경제도 혼란을 거듭하였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초유의 인플레가 개시되면서 경제는 커다란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27] 그는 19세기 조선사회는 정체와 위기의 시대였으며, 역사란 항상 발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영훈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결국 개항=근대기점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1876년 개항은 이를 계기로 '소농사회의 성숙'으로 그 발전방향이 집약되던 조선 농촌경제에 그와 전혀 상이한 유형의 서유럽적 근대가 접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진정 한국적 근대의 출발을 알리는 기점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개항은 소농사회와는 전혀 이질적이었던 서유럽적 근대, 즉 자본주의적인 근대가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에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시기는 개항 이후보다는 식민지 시기였다고 본다. 그는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근대적 제도 정비 이후에 식민지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그는 식민지경제는 1930년을 전후한 공황기의 단절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 3.7%의 성장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시기 성장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수출입 및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식민지시기의 공업화를 지역내적 연관효과가 절연된 비지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적

27) 이영훈. 2004.「총설: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371~372쪽.

www.kci.go.kr

순환관계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내적 연관도 심화되고 있었으며, 거기에 참여하는 조선인의 기업가적 활동도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28] 결국 한국자본주의의 뿌리는 식민지시기의 자본주의 발달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의 부정은 식민지 자본주의 발달의 부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론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달이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는 안병직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29]

이상 안병직·이영훈 등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 특히 자본주의 맹아론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자본주의 맹아론 비판은 맹아론의 이론과 실증, 양 측면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증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맹아론이 그만큼 실증면에서 취약했기 때문이다. 맹아론자들은 양안과 호적,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단편적인 자료들을 찾았을 뿐, 구체적으로 경영형 부농이나 상인자본가, 매뉴팩추어 등의 사례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 맹아론은 이론적으로도 지나치게 서구, 특히 서구에서도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모델로 함으로써 그와는 거리가 멀었던 조선사회의 특질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안병직·이영훈 등의 맹아론 비판도 역시 실증적·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실증적인 면은 미루어두고, 여기서는 이론적인 면만 살펴본다면, 안병직·이영훈의 논리는 근대는 곧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

28) 같은 글. 86~97쪽.

29) 이헌창은 안병직과 이영훈이 '식민지화 이전 소농사회의 발전→식민지시기 자본주의의 발전→해방 후 경제발전'이라는 역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헌창. 앞의 글. 12쪽).

www.kci.go.kr

는 자본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회였고, 조선이 자본주의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개항과 식민지화라는 외부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이다.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내재적인 힘과 외재적인 힘 가운데 어떤 때는 전자가 어떤 때는 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발전론은 내재적인 힘을 주로 강조하고 외재적인 힘을 상대적으로 소홀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영훈 등의 비판론은 거꾸로 외재적인 힘을 너무 강조하고 내재적인 힘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대는 곧 자본주의이며, 서양의 문명이라고 전제하는 점이다. 그들의 역사인식에는 '동양적 근대', '한국적 근대'라는 개념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또 이들은 근대 자본주의를 역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여기고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의 도움에 의해서만 근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미국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존 던컨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학자들의 내재적 발전론이 서구의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서구 모델을 아시아, 특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모델이 서구의 경험을 유효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30] 카터 에커트는 조선후기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는 남북한의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1876년 이전에 조선사회 내에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상업 발전의 스케일은 유럽 전근대의 것과의 비교는 차치하더라도, 일본 도쿠가와 시대의 그것과 견줄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에는 그 사회의 기본구조를 바꿀 만한 어

30) John Duncun. 1995.「미국 대학 한국사교육의 동향과 문제점」.『역사교육』58. 221쪽.

www.kci.go.kr

떤 내재적인 경제적 변화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히려 당시 조선사회는 소수의 전제적인 지주 가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학자들이 조선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으려 하는 것은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으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근대적인 기술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본주의는 조선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876년 이후 비로소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1]

카터 에커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한국학계의 조선후기 사회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조선시대사 연구는 에드워드 와그너, 제임스 팔레, 그리고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연구였다. 에드워드 와그너는 1970년대 이후 조선시대 양반 연구를 통하여, 15세기 조선사회는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과거제의 실시로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관료로 충원되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16,17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사회는 점차 이미 분화된 계층이 고정화되어 가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8세기 이후가 되면 비록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사회구조는 더욱 더 폐쇄적으로 굳어져 결국 왕조의 종막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32]

제임스 팔레의 조선시대 사회상에 대한 역사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관료적 군주제론이다. 즉 조선왕조의 군주권은 형식상으로는 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모든 권한을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 전제군주의 모습을 띠었지만, 실제 역사적 행위 영역 안에

31) Carter J. Eckert. 1991. *Offspring of Empire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pp.2~5.

32) Edward W. Wagner.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1(April 1974).

www.kci.go.kr

서의 군주권은 왕실과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의하고, 그 존재를 허용한 한낱 권력의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양반귀족제론이다. 즉 양반귀족은 지주로서, 노비주로서 여타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면서 경제력을 집중하는가 하면, 학문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 지배층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엄선된 혼인을 통한 세습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권한을 독점했으며, 과거제도를 독점하여 고위관직을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팔레는 이러한 양반귀족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골품귀족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 문벌귀족 · 권문세가를 거쳐 조선시대 양반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시간에 걸쳐 지배층으로 존재해 왔다고 보았다. 다만 조선왕조는 중국식 관료제가 발전, 정착한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관료귀족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는 노예제 사회론이다. 그는 고려 · 조선 왕조는 전체 인구에서 노비가 30%에 이를 정도로 일정하게 존속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예제 사회 다음에 반드시 봉건제가 와야 한다는 역사이론, 즉 스탈린주의적 단선적 역사발전단계론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한국 역사상 봉건제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역설하였다. 팔레의 조선후기 사회에 대한 인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반사회 고착론'이다. 그는 양반이란 앞서 본 것처럼 관직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습적인 신분엘리트라고 보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조선후기에 양반사회는 해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과거시험의 합격자가 몇몇 가문으로 한정되어 가는 등 양반사회는 더 폐쇄적으로 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다.[33]

33) 제임스 팔레의 조선왕조사 인식에 대해서는 김성호. 2002.「제임스 팔레의 조선왕조사 인식」,『역사비평』59. 128~133쪽; 정두희. 1999.『미국에서의 한국사 연구』. 국학자료원. 43~66쪽 참조.

www.kci.go.kr

이러한 시각은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경우도 거의 같다. 그는 1995년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기념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조선사회를 보는 핵심적인 두 개념은 폐쇄적인 세습귀족(즉 양반)과 노비제도였다. 조선사회는 수백 개의 친족 집단이 최상층을 독과점하는 폐쇄적인 구조로서, 여말선초에 수입된 성리학이 가부장적 족적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양반 엘리트가 명-청대 강남지역의 중국 신사층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훨씬 폐쇄적이고, 경제력보다는 관직 보유에 전력을 쏟았다는 점이다. 조선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인 노비계급은 전 인구의 30%에 달했다. 혈통에 기초한 신분 이데올로기가 노비제도를 반영구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는 조선 특유의 현상으로서, 헤이안시대의 일본이나 명-청대의 중국이 반계약적인 지주-전호 관계로 변화한 것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 사회관습을 통해 반상의 차별, 양천의 차별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중국의 당나라와 같은 '카스트적 폐쇄구조'를 형성했다. 조선후기에 오면 몰락양반의 등장, 납속제 등의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폐쇄적인 양반사회의 구조를 깨뜨리진 못했다.[34]

조선후기 사회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이동의 길이 거의 막혀 있던 폐쇄적인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사회상은 국내 학계에서의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성과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조선후기에 '新鄕'이라 불리는 새로운 향촌사회 주도세력이 등장하고, 이들과 기존 지배층인 士族 사이에 鄕戰이 벌어졌으며, 이는 이 시기 사회계층의 변동이 일

34)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1997.「미국의 한국사 연구동향」.『대동문화연구』32. 403쪽을 참조할 것.

www.kci.go.kr

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미국 학계의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문벌과 토호 등 기존 지배층이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사회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갔고, 새로이 등장한 계층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간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존 지배층의 지배력이 무너져가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학계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미국의 한국학계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팔레나 도이힐러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한국학 연구에 뛰어든 기본적인 동기는 한국사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즉 그들은 미국 학계가 한국사와 한국문화를 중국에 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 반감을 갖고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중국학으로부터 한국학을 독립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학자들이 식민사관 극복을 위해 한국사, 한국문화의 보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미국의 한국학자들은 미국의 학계에서 주변부 가운데에서도 주변부에 놓여 있던 한국학을 독립시키기 위해 한국사, 한국문화의 독자성, 더 나아가서는 특수성을 증명하려 애를 썼던 것이다.[35]

그리고 미국학계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50, 60년대 미국의 역사학계를 지배했던 동아시아 역사관, 즉 '전통/근대'의 이분법적 역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당시 중국사 연구자들의 '전통/근대'론은 중국은 야만적이나 서양은 문명화되었으며, 중국은 정체되었으나 서양은 역동적이고, 중국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변혁을 위해서는 '외

35) 이에 대해서는 김경일. 2003.「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4. 141~143쪽을 참조할 것.

www.kci.go.kr

부적 힘'의 충격이 필요하였고, 서양은 그러한 힘의 전달자였으며, 서구 침입의 자극 속에서 전통적 중국사회는 서구라는 이미지로 채색된 '근대적' 중국에 길을 내주게 되었다는 가정 위에 서 있었다. 이른바 '서구의 충격 – 동양의 대응'이라는 틀이었다.[36] 이러한 틀은 이미 19세기부터 만들어져 내려온 것이었지만,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을 뒷받침해 준 '근대화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즉 국내 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미국의 한국학계와 국내의 이영훈·안병직 등 경제사학자들의 학문적 입론은 모두 같은 '근대화론'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 탈근대론자들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근대화론자'들에 의해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발전론 비판은 1990년대 이후 미국학계와 한국학계의 이른바 탈근대주의 입장에 선 학자들에 의해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인다. 1990년대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자본주의의 세계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등이 나타나면서 탈근대론자들은 '근대주의'의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고, 2000년 이후 그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탈근대론자들은 한국학의 내재적 발전론이 기본적으로 '근대주의' 위에 서 있다고 비판한다. 내재적 발전론은 사적 유물

36) 이에 대해서는 폴 A. 코헨 1995. 장의식 외 옮김. 『미국의 중국사 연구』. 고려원. 139쪽 참조.

www.kci.go.kr

론의 세계사의 발전과정론을 원용한 입장의 것과, 근대주의의 입장에 선 것이 있었다. 그런데 탈근대론자들은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역시 근대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사적 유물론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근대주의(모더니즘)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이행' 혹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내재적 계기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 근대의 싹을 찾으려 한 '근대주의'에 매몰된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문학쪽에서 더 활발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후기 한문학을 연구하는 강명관은 내재적 발전론이 우리 역사의 해석에 일정한 편향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이제 실학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근대, 바로 그 근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대란 인류 역사의 보편적 단계가 아니라, 서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서구는 자신들의 근대를 식민지 침탈이란 방식으로 전파하였다. 비서구 사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근대는 식민지의 침탈이란 착취적 억압적 방식으로 강요된 것이다. 근대는 인류가 도달할 보편적 이상이 아니라, 서구에 의해 강요되어 지금도 보편적 가치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강요된 근대로 인해 '비서구사회'의 상처난 자존심은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는 왜 근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이 물음은 마침내 근대 콤플렉스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역사 속에서 '擬似 近代'를 찾기에 이르렀던 것이다.[37]

37) 강명관. 2002.「한국 한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 방향」.『한국학논집』2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86쪽.

www.kci.go.kr

그는 근대에 모든 가치를 귀속시키는 '근대주의'는 조선후기의 이른바 '실학자'들의 글에서 근대성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반면에 성리학자들의 글들은 '非實學'이라 하여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사회가 성리학에 의해 지배된 것은 조선전기보다는 오히려 조선후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주의자들은 조선후기의 학풍은 실학으로, 조선전기의 학풍은 성리학으로 정리하려 하였던 것도 역시 근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조선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강명관은 다음가 같이 정리한다.

> 요약하자면, 자생적 근대는 없었다. 조선후기에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중세의 발전과 변화였다. 이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근대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발전과 변화를 보았던 시각이 문학사까지 왜곡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민족 스스로가 근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려 하였던 것이나, 사실 우리가 했던 일은 우리의 역사 내부에서 서양의 근대를 찾으려고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내재적 발전론의 최대 모순이다. 주체적 근대를 모색하면서 실제로는 타자의 모습, 서양의 모습을 우리 역사 내부에서 찾는 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가?[38]

결국 그의 결론은 이러하다. "우리는 중세와 근대 사이의 깊은 단절을 인정해야 하고, 조선후기의 변화된 역사상은 근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발전이란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근대는 곧 서구의 근대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조선후기에서 서구의 근대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중세의 발전된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내재적 발전

38) 같은 글. 92쪽.

www.kci.go.kr

론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단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발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서 근대를 모색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39] 강명관의 글에서는 '탈근대'의 주장이 명확히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점, 근대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다 본격적인 탈근대론적 입장에서의 내재적 발전론 비판은 고미숙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제국주의 침탈에 의해 근대화가 진행된 한국의 경우, 근대와 근대 이전의 두 연대 사이의 내재적 발전이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방법론은 으레 근대 민족주의 개념적 규준에 입각하여 그것들의 맹아적 형태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선후기의 텍스트를 읽어내려 했고, 그럼으로써 텍스트의 무수한 분절점들이 침묵, 봉쇄당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0] 그는 "조선에 있어 근대는 20세기 신천지에 신광채를 발하면서, 어느 날 문득 '번개처럼' 느닷없이 시작되었다. 청나라 문명에 압도되어 중세의 황혼을 통과하는가 했는데, 문득 한 순간에 서구문명이라는 도도한 아침햇살에 노출되어 버린 형국"이었다는 것이다.[41] 고미숙도 강명관과 마찬가지로 두 시기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간 항상 연속적으로 사고했던 두 시기를 단절시켜 각각의 담론들, 그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재적 발전론의 관성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대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위계화하는 방식을 전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2]

39) 같은 글. 92~93쪽.
40) 고미숙. 1999.「18세기에서 20세기 초 민족담론의 변이양상」.『현대문학의 연구』13. 45쪽.
41) 같은 글. 58쪽.
42) 같은 글. 62쪽.

www.kci.go.kr

강명관과 고미숙의 전략은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근대'라는 안경을 벗어던지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와 근대를 내재적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연결시켜 사고해온 습관을 버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이들이 제안한 방법론은 하나는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선시대와 근대 사이를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외부의 충격을 중시하자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강명관은 조선후기에 중국의 여러 학문의 조류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중시하고 이를 추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미숙은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우에도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은 결국 외재적 원인에 대한 중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내재적 발전론의 진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적 발전론은 근대화론자 혹은 탈근대론자들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그들의 비판론의 핵심은 내재적 발전론이 서구의 발전모델, 혹은 서구의 근대성을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주로 언급한 것은 시대구분과 자본주의맹아론, 그리고 근대로의 이행준비론이었다. 여기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비판론을 주로 검토하면서 내재적 발전론의 진로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시대구분론과 관련하여

www.kci.go.kr

한국사의 시대구분은 내재적 발전론의 연구 성과가 최종적으로

집약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학계의 시대구분론은 대체로 3시기 구분법, 즉 고대-중세-근대로 되어 있다. 물론 앞뒤로 원시시대와 현대가 편의상 따라붙는다. 1960년대 초창기의 시대구분론에서는 대체로 고대는 노예제적인 사회, 중세는 봉건제 혹은 농노제적인 사회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앞서 본 것처럼 이영훈은 스탈린이 설정해놓은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한국사를 도식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기동도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의 개념을 한국사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3시기 구분법은 유럽사를 표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른 지역의 역사에 적용할 때에는 유럽사와 상대적인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며, 또 그 과정에서 서구적 개념의 확대해석과 적용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하였다.[43]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비판 논점은 서유럽사를 모델로 한 발전단계론을 한국사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또 하나 그들이 비판하는 점은 시대구분의 기준이다. 이기동은 내재적 발전론에서의 시대구분의 기준이 노동력의 수탈관계, 즉 생산관계에 두어져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대신 제3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기백의 지배세력의 교체, 허흥식의 지배적인 종교의 변화,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공동체적인 사회집단의 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44]

그러면 3시기 구분법은 과연 유럽사를 모델로 한 것이며, 이를 한국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가. 3시기 구분법이 본래 유럽사를 모델로 하여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르는 시대구분 논쟁은 대체로 노예제나 농노제와 같은 유럽사의 시대구분의 개념을 차용하여 진행된 것

43) 이기동. 1996.「한국사시대구분의 반성과 전망」.『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44) 같은 글.

www.kci.go.kr

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의 시대구분 논쟁에서도 생산관계나 생산양식과 같은 개념만이 아닌 다른 개념들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농민의 사회적 존재형태, 친족공동체의 범위의 변화, 지배체제와 사상의 변화 등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45]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다시 제기된 시대구분 논쟁에서 시대구분의 기준은 더 다양해졌다. 새로이 제기된 기준들은 생산력 수준과 토지소유의 성격 문제, 국가의 조세수취와 토지분급제의 성격 문제, 공동체의 성격문제(세대공동체와 친족공동체), 군현제의 편성원리 등이며, 이제 시대구분논쟁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6]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시대구분을 논의하는 이들은 대부분 내재적 발전론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학계, 특히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시대구분 논의는 유럽사의 그것을 참고하면서도 한국적인 상황을 더 염두에 둔 것으로 이미 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에서 설사 고대-중세-근대의 3시기 구분법으로 시대구분을 말한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유럽사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비판할 단계는 벌써 지나갔다고 여겨진다.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한국사 시대구분론은 이미 세계사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사의 개별성, 특수성을 더 고려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47]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학계 일각에서는 3시기 구분법이 유럽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시대

45) 한국경제사학회편. 1970.『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46) 이인재. 2002.「한국 중세의 기점」.『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47) 이경식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 입장의 시대구분론이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한국사적인 개별성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그 발전을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이경식. 1997.「한국사연구와 시대구분론」.『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245쪽).

www.kci.go.kr

구분법과 시대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것은 지배세력의 교체, 지배적인 종교의 변화, 공동체적인 사회집단의 변화와 같은 부분적, 일면적인 것들뿐이었다. 또 3시기 구분법이 아닌 4시기 혹은 그 이상의 구분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구분법은 아직 어떤 체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시대구분의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무로 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의 성과들을 토대로 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하여

다음에는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1950년대 이후의 북한과 중국의 자본주의맹아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중국의 모택동은 이미 19세기의 중국은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농산물의 상품화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48] 물론 모택동 이전에도 1920~3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 가운데 자본주의맹아설을 언급한 이들이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맹아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국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는 것은 정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송원설, 명청설로 나뉘었고, 심지어 전국시대설, 서한설, 당대설을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

48) 『毛澤東選集』 제2권(北京. 人民出版社. 1992). 596쪽(임계순. 2000. 『淸史』. 신서원. 327쪽 참조).

www.kci.go.kr

왔다. 자본주의맹아론이 이렇게 정설이 되자, 이제는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자본주의맹아를 더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외부세력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식의 답변도 나왔지만, 명청시대 이후의 모든 시기에 그러한 이유를 가져다 댈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게 되자, 이제는 자본주의맹아설은 '자본주의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중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못할 것이 없으니 서양에 자본주의가 있었다면 중국에도 없었을 이유가 없다는 오기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 자본주의맹아설이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중국 청화대학의 리보중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는 "자본주의 강박관념은 중국 경제사연구에서 중국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물사관이라는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대상은 오직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어야지 어떤 논리나 이념에 의해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 맹아의 출현 여부를 논할 때, 어떤 이론에 따라 중국에는 당연히 이러한 맹아가 있어야 했다든가, 혹은 '만약 ○○이 없었다면 중국은 ○○○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중국의 역사를 편견 없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분석할 수 있고,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규칙과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49]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리보중이 그간의 자본주의 맹아 연구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본주의 맹아연구가 20세기 서양에서 유행한 이른바 '충격과 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49) 이보중. 2006. 이화승 옮김.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34~35쪽(원저는 李伯重. 2002. 『理論, 方法, 發展趨勢 : 中國經濟史研究新探』.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www.kci.go.kr

자체적인 역사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중국의 역사를 바라보았으며, 중국 내부에서 주체적인 동력에 의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즉 역사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고, 주동력은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맹아 연구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상품경제, 고용노동, 초기적인 공업화 등의 많은 사실을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맹아 연구가 모델로 하였던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 모든 국가(혹은 지역) 중 유일하게 영국만이 '자발적으로' 전통 농업사회에서 근대 공업사회로 전환했다. 다른 모든 국가가 근대화과정에서 어느 정도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오직 영국만은 '스스로 완성한 경제순환'의 기초 위에서 성공함으로써 '자립성'을 띠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공업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행 국가인 영국의 영향을 받았고, 영국에 이어 산업혁명이 일어난 프랑스와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영국형 모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구체적인 모델로서 보편성을 갖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영국의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 산업혁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석탄 생산과 철강 생산이었다면서, 중국,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상업과 수공이 가장 발달하였던 강남지역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50] 리보중 외에도 중국과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명청대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던 중국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유를 여러

50) 같은 책. 40~53쪽.

www.kci.go.kr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나열하면, 관리의 부패, 토지겸병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한 분배, 인구 증가, 기술개발 부진, 산업정책 부진, 영토확장 전쟁, 내란 진압, 관계수리 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재원 고갈, 銀價 등귀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등이 그것이다.[51]

이상에서 중국에서의 자본주의맹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논의는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맹아 문제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시사를 던져준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맹아 논의도 모택동이 말한 것처럼 외래 자본주의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이 순수하게 가능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국뿐이었다는 것이 세계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른 나라들, 심지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산업혁명을 모델로 하여 이를 따라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자본주의는 각각의 나라에서 내재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증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1960년대 이래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맹아 연구는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고,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에서 일정한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고, 상업자본도 일정하게 축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조선후기 사회가 결코 정체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 연구는 정체론 극복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본주의 맹아라고 해석하고 이를 강조한 것은 무리였다. 조선후기의 경제사

51) 임계순. 앞의 책. 331쪽.

www.kci.go.kr

연구는 고려와 조선전기의 경제적 조건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자본의 축적, 시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등의 수준과 의미에 대한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한국은 1876년 개항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개항 이후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전적으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발생,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사회든지 발전 혹은 변화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때에 따라서는 외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더 중요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주어진다 해도 주체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면 근대로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 발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조선후기 이래 조선사회에서 성장해온 상인, 수공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속의 내재적 요인은 여전히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조선후기 연구에서의 근대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편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조선후기에서 근대성을 찾는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대신 그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전통과 근대를 단절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영향력을 중시해야 하고, 조선후기의 시기를 근대로의 이행보다는 중세 내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ww.kci.go.kr

그럼 과연 이와 같은 대안은 바람직한 것일까. 전통과 근대를 단절적 혹은 단층적으로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들은 근대는 곧 서구의 근대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 내부에도 영국의 근대, 프랑스의 근대, 독일의 근대, 미국의 근대가 각각 다르다. 서구의 근대란 추상화된 개념일 뿐 구체적인 것은 각각의 나라의 근대이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는 한국의 근대일 뿐 서구의 근대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은 근대는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가 개항을 통해 만난 서구의 근대가 습합되어 만들어진 근대이다. 즉 한국식으로 변용된 근대일 뿐인 것이다.[52] 한국의 근대에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적인 요소, 식민지배자들이 남기고 간 식민지적 요소,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요소 등이 혼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는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서양의 근대'라기보다는 전통과 서구가 혼융된 근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절론적,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연속적, 접합적, 혼융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53]

---

52)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이론이 찰스 테일러의 '복수의 근대론'이다. 그는 근대성의 등장을 역사적 발전단계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정한 문화의 등장으로 본다. 이것이 역사적 발전단계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인 이상, 근대성이 등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문화와의 적응과정 속에서 독특한 형태의 근대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각 문명마다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대성의 경우도 그 토착문화와의 상호 적응과정에 의해 문화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복수의 토착문화가 존재하므로 그 토착문화와의 적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근대 역시 복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harles Taylor. 2001. "Two Theories of Modernity," *Alternative modernities*, edited by Dilip Parameshwar Gaonka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참조.

53) 폴 코헨은 각국의 전통 내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구의 근대성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근대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근대화된 사회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생명력을 가진 전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민. 2005.「근대성과 한국학 : 한국사상사를 중심으로」.『오늘의 동양사상』13.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28쪽 참조. 폴 코헨의 책은 Paul A. Cohen. 1984. *Discovering History*

www.kci.go.kr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김영민은 앞서 본 강명관이나 고미숙처럼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조선시대사를 보는 것보다는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되 근대성 개념을 복수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그는 근대성이 복수라고 생각한다면 '비교'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 중국, 일본은 세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성리학이 유산 때문에 적절한 비교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경우 한국의 근대성담론을 곧바로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단순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54]

위와 같은 논의들을 참고한다면,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어떻게 내재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강명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를 중세사회의 발전이라는 틀 내에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세사회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비록 그 움직임이 미미한 것일지라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아직은 추운 엄동설한이지만 2월 초에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 있는 것은 그 즈음이면 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들판에 꽃이 몇 송이 피었다고 바로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봄이 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를 조선후기의 이른바 '실학'과 연결시켜 생각해보자. 18세기부터는 이미 중국을 통해 서구의 새로운 과학지식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특히 우주와 지구, 그리고 세계지리와 관련된 지식들은 이전의 우주관, 세계관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1876년 이전에 이미 서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

---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54) 김영민. 앞의 글. 133쪽, 145쪽.

www.kci.go.kr

마 받고 있었다. 즉 조선사회와 서구세계의 접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명관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후기를 중세사회 내부에서의 발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서구세계와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실학자들의 사상은 아직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세의 틀 내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부에 중세의 틀을 넘어서는 요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과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상고시대를 모델로 한 경학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였다. 그의 연구 방법론은 아직 경학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고자 한 새로운 시대는 상고시대의 모습 그대로라기보다는 새로이 창조된 상고시대였다. 즉 '오래된 미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상은 신분제와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세사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조선후기 정약용과 같은 지식인들이 구상하였던 새로운 사회를 꼭 서구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모델로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선후기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유교적 지식인들이 그린 사회는 오히려 '大同社會'였다. 중국의 캉유웨이가 주창한 것도 역시 '대동사회'였다. 물론 그들이 구상한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유교지식인들은 상고시대의 이념을 빌려 '대동사회'라는 미래를 구상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는 물론 서구의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사회였다. 20세기 전반에 한국과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이에 동조하였던 것은 그것이 대동사회론과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사회에는 대동사회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학파처럼 상업과 수공업의 진흥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아직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이후 역사의 진행에 따

www.kci.go.kr

라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주창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북학파의 맥을 이은 개화파들이 서구자본주의의 수용을 주장한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는 여전히 농업, 특히 소농 중심의 평등사회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용섭은 이를 '농업개혁의 두 가지 길'로 설명하였다. 김용섭은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맹아론으로서의 경영형부농론보다는 '두가지 길'론을 더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조선후기 이래 관료 혹은 지식인들의 농업개혁론이 '지주적 코스의 농업근대화론'과 '농민적 코스의 농업근대화론'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코스가 개항 이후 개화파와 농민군의 개혁방향으로 이어졌고, 일제하에서는 지주·자본가를 대변하는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의 개혁방안과 농민·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개혁방안으로 나뉘었으며, 이것이 해방 이후에 우익과 좌익의 건국 방안으로 각각 이어졌다고 보았다.[55]

한편 동학농민전쟁을 연구해온 조경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 "일찍이 주목을 끌어온 자본주의 맹아론은 결국은 조선의 자생적인 자본주의근대화의 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세계사의 기본법칙'인 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라는 발전이 일국사적으로 관철한다고 보는 관점은 이제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중략) 이미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라고 말하면서 그 실은 서구적 발전법칙을 적용하려는 일국사적인 내재적 발전론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에서 본 김용섭의 '두 가지 길'론을 인용하면서 개화파가 근대지향적이었던 데 반하여, 소농보호나 소농회귀의 입장에서 농민적 토지소유를 구한 소농·빈농·반프롤레타리

55) 김용섭. 1992.『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 일조각.

www.kci.go.kr

아층의 자세는 반근대적 지향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무전농민에 대한 이해를 보인 실학도 반드시 근대의 방향으로 정향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근대 이행기의 민중운동이 근대적이라고 하는 역사인식은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지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민중은 본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해 간다. 과거에 있었다고 관념된 목가적 공동체에의 환상을 유토피아 사상으로까지 만들어 현실의 구 권력(봉건세력)이나 새로운 조류(자본주의)에 저항하려는 것이 근대 이행기의 일반적인 농민운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未發의 계기라고도 할 '또 하나의 근대'를 추구하는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56]

조경달의 주장은 사뮤엘 아이젠쉬타트가 말한 '복수의 근대'론을 연상시킨다. 사뮤엘 아이젠쉬타트는 근대는 곧 서구적 근대로 흔히 인식되어 왔지만, 각 지역의 근대는 그 지역의 문화, 전통, 역사적 경험 등에 의해 각기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반서구 혹은 비서구적인 운동도 일어났지만, 그것도 사실은 모두 '근대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의 결론은 더 이상 서구의 근대만이 '진짜 근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5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서구의 근대가 아닌 또 다른 근대가 조선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발전론은 이제 환골탈태해야만 하는 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의 폐기까지 말하고 있

56) 조경달. 1998.『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 東京. 岩波書店. 11쪽, 332~333쪽.

57) Samuel N. Eisenstadt(edit.), 2002. *Multiple Modernities*, Brunswick, N.J.Transaction Publishers.

www.kci.go.kr

지만, 역사 발전의 궁극적인 힘은 주체의 밖이 아닌 주체의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재적 발전론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외재적 계기를 무시하는 일국사적인 내재적 발전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외재적 계기와 내재적 계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역사 발전 이론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 내재적 발전론은 서구의 역사발전과정을 모델로 삼는 데에서 벗어나 '복수의 발전경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일원론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다원론적인 역사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학계의 시각은 앞서 본 시대구분론 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서구의 역사 발전 모델에 매달려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사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을 근거로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세계사의 기본법칙' 즉 보편주의적인 역사발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의 발전 과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상화하여 이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각 지역, 각 국가의 역사에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세계의 각 지역, 각국의 역사 발전과정은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국사 연구에서도 여전히 세계사적인 보편성은 고민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먼저 전제하고 이를 한국사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사의 개별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역사들과 비교하면서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그려보는 것이 더 적절한 순서라고 여겨진다. 세계사적인 보편성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학으로 넓혀서 말한다면, 한국학은 한국의 역사 · 문화가 가지는 개별성, 특수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역사 · 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동아시아적인 보편성,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명관. 2002.「한국 한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 방향」.『한국학논집』 2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고미숙. 1999.「18세기에서 20세기 초 민족담론의 변이양상」.『현대문학의 연구』13.

김경일. 2003.「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64.

김광진 외. 1957.『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 (일송정. 1989).

김성호. 2002.「제임스 팔레의 조선왕조사 인식」.『역사비평』59. 128~133쪽.

김영민. 2005.「근대성과 한국학 : 한국사상사를 중심으로」.『오늘의 동양사상』13. 예문동양사상연구원.

김영호. 1969.「한국사정체성론의 극복의 방향 -시대구분과 자본주의 맹아의 문제」.『아세아』1969년 3월호.

김용섭. 1992.『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 · 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 일조각.

김인걸. 1997.「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박찬승. 1994.「분단시대 남한의 한국사학」.『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박찬승. 1997.「미국의 한국사 연구동향」.『대동문화연구』32.

방기중. 1992.『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1930 · 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안병직. 1981.「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안병태. 1975.『朝鮮近代社會經濟史硏究』. 東京. 일본평론사.

www.kci.go.kr

윤사순. 1990.『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열음사.
이경식. 1997.「한국사연구와 시대구분론」.『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이기백. 1961.『국사신론』. 일조각.
이기백. 1968.「1967년도 한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국사).『역사학보』39.
이기동. 1996.「한국사시대구분의 반성과 전망」.『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이보중. 2006. 이화승 옮김.『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이영호. 2002.「내재적 발전론을 둘러싼 논의」.『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이영훈. 1987.「한국자본주의 맹아문제에 대하여」.『한국의 사회경제사』. 한길사.
이영훈. 1996.「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경제사학』21.
이영훈. 2002.「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역사와 현실』45.
이영훈. 2004.「총설: 조선후기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우성. 1973.「실학연구서설」.『실학연구입문』. 일조각.
이인재. 2002.「한국 중세의 기점」.『한국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이헌창. 2007.「한국사파악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점」.『한국사시민강좌』40. 일조각.
임계순. 2000『淸史』. 신서원.
임형택. 1981.「실학파문학과 한문단편」.『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정두희. 1999.『미국에서의 한국사연구』. 국학자료원.

www.kci.go.kr

조경달. 1998.『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 東京, 岩波書店.

천관우. 1952 · 1953「반계 유형원연구 – 실학 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 단면」.『역사학보』2 · 3

한국경제사학회편. 1970.『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Charles Taylor. 2001. "Two Theories of Modernity," *Alternative modernities,* edited by Dilip Parameshwar Gaonka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Carter J. Eckert.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Edward W. Wagner.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1 (April 1974).

John Duncun. 1995.「미국대학 한국사교육의 동향과 문제점」.『역사교육』58.

Paul A. Cohen.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폴 A. 코헨 1995. 장의식 외 옮김.『미국의 중국사 연구』. 고려원.

Samuel N. Eisenstadt(edit.), *Multiple Modernities*, Brunswick, N.J.Transaction Publishers, 2002.

(2007.11.28 접수: 2007. 12.3 채택)

www.kci.go.kr

박 찬 승

현재 한양대 사학과 교수로 있으며 주요 저서에는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민족주의의 시대』(경인문화사, 2007)가 있다. 한국근대사상사와 한국근대사학사, 한국근현대사회사 등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쓰고 있다.

E-mail: pcshistory@hanyang.ac.kr

www.kci.go.kr

www.kci.go.kr